

수소 화물차 · 버스 · 택시 연료비 지원방안 마련

민주 김운덕 의원, 수소 상용차 활성화 지원 법안 대표발의

수소 전도사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전주갑)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소 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두 건의 법안을 25일 동시에 발의한 것이다. 김운덕 의원은 "수소경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 역시 경제 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기 위해 최근 전주·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용 수소 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 활성도가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운덕 의원은 "그러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

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김운덕 의원은 "시정,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소 연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소 자동차를 널리 보급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 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선으로 서울과 부산 간 거리 약 400km를 환산할 경우 연료비가 약 3만5,000원 가량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전북행동 제공>

“담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참사, 환경부가 책임져야”

최영일 도의원 천막농성 이어가

지난 18일부터 행정안전부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 의원이 이번엔 환경부로 옮겨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세종시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지속해 온 최영일 의원이 지난 24일 순창 등도내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25일부터는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환경부로 옮겨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의원은 이번 도내 수해참사가 용담·섬진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라고 지적하며 지난 11



일 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을 향의 방문했고 지난 18일부터는 도내 7

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행안부 앞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였다. 최 의원은 환경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홍수 예방보다 물 이용에 초점을 맞춘 댐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며 "수해참사와 관련해 환경부의 공식사과와 실질적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수해피해조사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0년 된 댐 운영규정 또한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

전북도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단독처리 시설은 연 4회, 하수연계처리 시설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점검은 새만금유역 외 진안, 장수, 고창(단독처리), 무주, 임실(연계처리) 등 5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28까지 3일간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처리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및 관리실태 ▲악취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

준 준수 여부 ▲기타 운영·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하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복지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 처리시설보다 강한 기준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철저한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점검에 다소 제약이 있으나 자칫 이 시기에 운영·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당초 계획대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방통위, 방역 방해 코로나19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

‘양성평등정책 분배 정의 제고, 핵심은 의회의 역할’

전북연구원, 도·시군의원과 성인지예산 워크숍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전북 성별영향평가센터(소장 이수인)는 25일 '전북지역 의원과 함께하는 성인지예산 워크숍'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상임대표가 전북지역 성평등 현황과 과제를 진단했다. 이어 성인지예산서 심사 제도와 전북지역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후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지역에서 성평등한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루어져 양성평등정책과 분배 정의 제고하려면 의회의 역할이 핵심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전주,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등 주요 시군 의원, 젠더전문가와 함께 성인지예산 워크숍을 열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 사회적 제약들과 무관심 속에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이 지기가 성인지예산제도 내실화에 다가가는 한 발자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임 도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히 여성과 남성을 분류하는 등의

부실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사업의 선정과정이나 운영에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주군 이해양 의원은 "도내 각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들을 상호대조해 성별영향평가가 내실있게 되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 표준적인 조례가 14개 시군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주시에서는 서난이, 허옥희, 이운자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고 남원시는 박문화의원, 순창군에서는 이기자, 신정익 의원이 함께했으며 부안군에서는 장언이 의원이 참석했다. 이후에 시군지역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유호상 기자

도, 비상진료상황실 재가동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라... 진료 가능 의료기관 안내 지난 1차 총파업때 도내에서 35%가량 휴진 큰 공백 없어

전북도는 대한의사회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2차 집단휴진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재가동한다. 도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도내 통학을 지속적으로 파악, 도민들의 진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군 보건소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의 불편사항 접수와 불

법 휴진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같은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안내 등으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민들은 전북도와 시·군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콜센터(129) 등을 통해 비상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내 응급환자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등 19개

소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외래진료 환자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69개소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병원 및 보건소 412개소는 이번 집단휴진기간동안 야간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전북의사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4대 보건의료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점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며 지난 14일 1차 총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1차 총파업 때는 도내 1,164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35%가량이 여름휴가 등 사유로 휴진됐고 큰 진료의 공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